

2022년 중 핀테크·빅테크의 지급서비스 제공 및 오픈뱅킹 이용이 확대되는 등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 흐름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시와 관련한 논의가 심화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및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등 지급결제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또한 소액결제시스템에 내재된 차액결제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참가기관의 담보 납입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입될 경우에 대비해 모의실험 등을 통해 기술적·제도적 사전 준비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ATM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ATM 위치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민간 지도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중요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와 개선권고, 지급결제 참가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한은금융망에 대한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오픈뱅킹공동망의 안전성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추진 동향에 발맞추어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를 한층 더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과 함께 다양한 활용사례를 실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 정비, IT부문 운영리스크에 대한 대응력 제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시 논의 참여 등과 같은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도 확충할 예정이다.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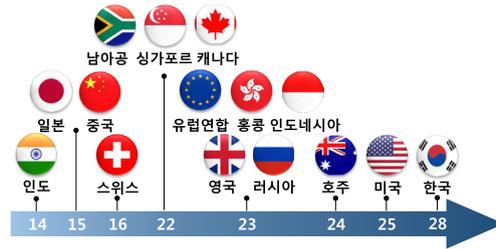
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국제금융전문표준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3~8p).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도입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 최초로 고객 간 자금이체를 24시간 연중무휴 실시간 처리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한 고객 자금이체 수요 증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국민들의 자금이체 편의 및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했다. 그러나 한은금융망을 통한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를 익영업일에 처리함에 따라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수취인에게 먼저 지급한 자금을 다음날 이체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따라서 신용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참가기관의 담보 납입부담이 발생하며, 최근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관련 국제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15년 이후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했거나 구축 중인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은 이러한 이연차액결제 방식이 아닌 금융기관 간 신용리스크가 원천적으로 제거되는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참가기관 대상 서베이 등을 거쳐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참가기관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가 간 지급규모 확대로 지급결제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주요국에서 국가 간 지급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데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 「지급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 26개 회원국 중 24개 국가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에 국제금융전문표준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의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현황



자료: 각국 중앙은행

②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비율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8~11p).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이체의 한도(순이체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동 한도에 연동된 사전담보를 한국은행에 납입토록 하는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¹⁾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담보제공비율을 100%로 올리고, 참가기관의 부담을 고려해 2022년 8월 100%를 목표로 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금융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동 비율을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0%에서 50%로 20%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2022년

1) 과거 지급결제부문의 국제기준인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CPSIPS, 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에서는 신용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순이체한도 등을 설정해 리스크의 크기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뿐 목표수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 제정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에서는 참가기관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등 리스크 관리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10월 이후 단기금융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당초 2023년 2월 동 비율을 기존의 70%에서 80%로 인상하기로 했던 일정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은 2023년 8월 80%, 2024년 8월 90%, 2025년 8월 100%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포괄범위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추가해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조달 부담을 완화했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¹⁾

(%)

	기존	2023.2	2023.8	2024.2	2024.8	2025.2	2025.8
변경전	70	80	80	90	90	100	100
변경후		70	80	80	90	90	100

주: 1) 2023년 3월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포괄범위

변경 전	변경 후	기간
·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주택금융공사 MBS,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	(좌 동)	상시
-	·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은행채권, 9개 공공기관 ¹⁾ 발행채권	2022.11.1~ 2023.7.31일 ²⁾

주: 1)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2) 2023년 3월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은행들은 결제이행을 위해 한국은행에 담보로 납입하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이 바젤 III 기준 유동성비율 산정 시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규제 준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을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에 제시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담보납입액에서 순이체한도 소진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미사용 담보금액으로 간주해 고유동성자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유동성비율 산정 시점의 미사용 담보금액 산출이 용이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제반 조치가 완료된 이후 금융감독원은 2022년 2월 단기유동성비율 규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정 시 미사용 차액결제담보를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장기유동성비율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산정 시에도 미사용 차액결제 담보를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③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등 사전 준비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12~15p).

최근 주요국에서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 현금이용 감소세 지속, 스테이블코인 확산 및 안정성 우려 증대 등을 배경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관련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CBDC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했다. 이와 함께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은행은 우선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해 모의실험 연구를 계속 수행했다. 2021년 중 CBDC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와 같은 기본기능을 실험한 데 이어 2022년 중에는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의 오프라인 거래,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

자산의 구매, 국가 간 송금 등의 확장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분산원장의 처리성능 개선을 위한 새로운 IT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실험했다. 모의실험 결과 CBDC의 기본기능과 확장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안정적인 CBDC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분산원장기술의 처리속도 개선이 필요하며 새로운 IT기술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는 점 등의 결론을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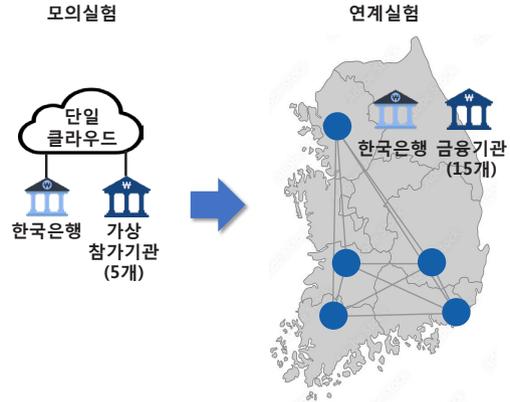
오프라인 CBDC 거래 방식 개요



자료: 한국은행

모의실험 완료 이후에는 한국은행의 모의실험 시스템을 은행의 테스트 시스템과 연계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CBDC의 유통 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실험했다. 연계실험 결과 CBDC 유통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단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시된 모의실험에 비해 처리속도가 다소 느려진 점과 은행별 IT장비 성능에 따라 처리속도가 달라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BDC 모의실험 및 연계실험 환경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CBDC 정책연구 심포지움」,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등을 통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및 시장참가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CBDC와 관련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고서 등의 형태로 발간하는 등 국민들의 CBDC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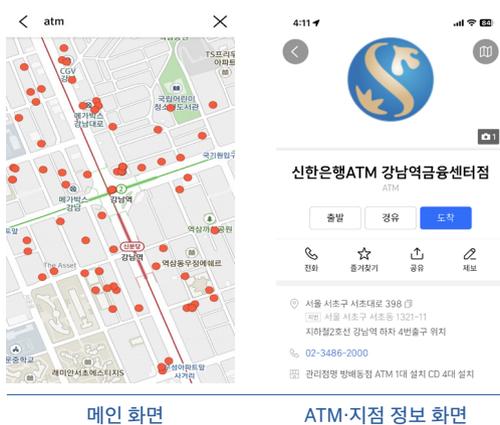
한편 국제사회의 CBDC 관련 논의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CBDC 도입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와 관련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상호협력을 강화했다.

④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ATM 이용에 관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15~19p).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ATM 및 은행 지점 위치정보 통합조회서비스의 정보 제공 채널을 기존의 전용 앱(금융맵 앱 등)에서 민간 지도플랫폼 사업자로 확대했다. 그 결과 국민

들이 자주 사용하는 지도플랫폼에서 ATM 및 은행 지점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들의 현금 이용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금융맵 서비스 DB 연계 후 민간 지도플랫폼 정보 제공 (예시)



메인 화면

ATM·지점 정보 화면

자료: 티맵

5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등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20~21p).

2022년 중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복원력 추가지침」,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사이버복원력 지침」 등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에 의거해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완료했다.

평가 결과, 한국거래소는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리스크 및 사이버복원력 관리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권고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도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시장데이터 공개, 운영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2개 은행과 1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해 해당 기관들의 일중유동성 및 결제리스크 관리 등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IT 관련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금이체업무 수행절차 보완과 유동성 위기 시의 대응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권고했다.

6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 규제·감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21~22p).

2022년 중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감시와 관련한 법률 제정 등의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우리나라도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과 관련해 민·관 합동 TF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국은행은 동 TF에 참여해 세부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또한 암호자산 관련 주요 이슈, 주요국 사례 및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정리해 책자로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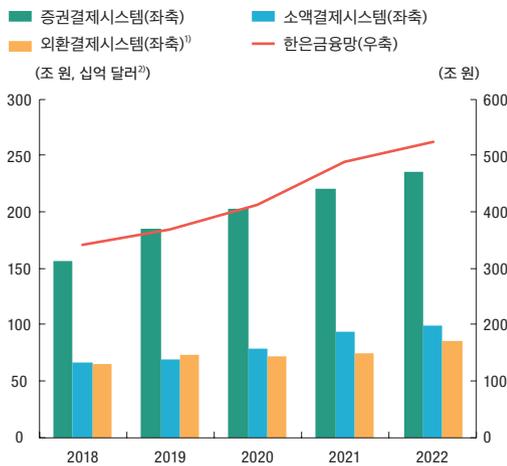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7 2022년 중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 이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다(41~51p).

2022년 중 증권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은 기관간RP 거래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해 일평균

236.8조 원을 기록했다. 소액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5.2% 증가해 일평균 99.3조 원을 기록했다.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865억 달러로 전년대비 14.9% 증가했다. 증권·소액·외환결제시스템 등을 통한 금융기관 간 결제가 최종 완결되는 한은금융망의 결제금액은 일평균 524.3조 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했다.

주요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규모 추이(일평균)



주: 1)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 기준

2) 외환결제시스템은 십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41~51p).

2022년 중 한은금융망은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 소

액 및 증권결제, 국제적으로 연계된 외환동시결제 등에 대한 최종결제 서비스를 연중 원활히 제공했다. 다만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대기비율²⁾(일평균)과 일종당좌대출 소진율³⁾(일평균)은 2022년 중 각각 4.1%, 23.0%로 전년(3.7%, 20.3%) 보다 소폭 상승했다.

대기비율¹⁾ 및 일종당좌대출 최대소진율²⁾ 추이(일평균, 금액 기준)



주: 1) 전체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절감을 위한 다자간 동시처리 대기 제외)의 평균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종 순당좌대출 최고사용액/일종당좌대출 한도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2년 중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 소진율⁴⁾(일평균)은 15.9%로 전년(18.3%)에 비해 하락했다. 또한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도 전년(171회)보다 크게 감소한 80회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전년 중 순이체한도 주의 수준 상회 횟수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지저효과에 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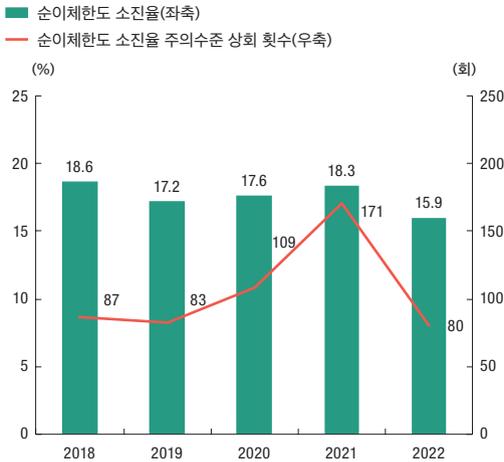
2) 대기비율은 한은금융망 결제금액 중 참가기관의 당좌예금잔액 부족으로 자금이체 신청이 대기되었다가 결제된 금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참가기관 A의 총결제금액이 1,000억 원이고 이중 대기되었다가 결제된 금액이 50억 원인 경우 대기비율은 5%이다.

3) 일종당좌대출 소진율은 일종당좌대출 한도 대비 사용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종당좌대출 한도가 1,000억 원이고 사용금액이 300억 원인 경우 소진율은 30%이다.

4) 순이체한도는 참가기관이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는 고객자금이체의 純 한도로서, 개별 참가기관이 시스템 전체에 초래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의 크기를 의미한다. 참가기관이 신규 고객자금이체를 신청하면 동 한도가 소진되며,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 고객자금이체를 수취하면 동 한도가 복구된다.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순이체한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납입하도록 해 참가기관이 적정 수준의 순이체한도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인한다.⁵⁾

순이체한도 소진율¹⁾(일평균) 및 주의수준(70%) 상회 횟수 추이



주: 1)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소진율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장내 주식시장의 결제는 기준 시한 이전에 전액 완료되었고, 장외 기관간RP 결제시스템의 경우 대금 지급과 증권 인도를 동시에 처리해 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 비중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94.5%를 기록했다.

【향후 정책방향】

㉑ 한국은행은 실시간총액결제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등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59~61p).

한국은행은 신용리스크 축소를 통해 지급결제시스

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중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환경을 고려해 도입시점 및 최적의 시스템 설계방안을 포함한 실시간총액결제 방식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지급결제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전문을 개발하고, 이를 한은금융망에 적용하기 위해 IT 시스템을 개편한 후 참가기관과의 공동 테스트 등을 거쳐 2028년경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픈뱅킹공동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 지정,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참가제도 개선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㉒ 한국은행은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도입될 경우에 대비해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62~63p).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모델 및 제도를 탐색하기 위해 기술·제도·파급효과 측면의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CBDC 도입 관련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CBDC 설계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CBDC 기반 토큰화 예

5) 2021년에는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모주 청약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규모 고객자금이체의 영향으로 순이체한도 주의수준 상회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공모주 청약 시 고객들이 청약 주관기관에 증거금을 납입하는 과정, 주관기관이 동 자금을 단기운용하는 과정, 청약 후 주관기관이 증거금을 고객에게 환불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고객자금이체가 발생한다.

금 발행 방안 등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CBDC, 토큰화 예금과 같은 디지털화폐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CBDC가 디지털 경제 하에서 화폐시스템의 준거(anchor)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부문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중 은행들과 함께 실시한 CBDC 연계실험을 2023년에는 비은행 금융기관 및 핀테크기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2022년 중 실시한 모의실험에서 개선 필요사항으로 도출된 처리속도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관한 연구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관련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CBDC와 관련한 제도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는 한편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CBDC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CBDC와 관련한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CBDC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⑪ 한국은행은 모바일 현금카드의 QR코드 인식방식 도입 및 ATM 활용방식 개선 등 지급결제 제도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63~64p).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모바일 현금카드를 국내 모든 ATM 기기에서 스마트폰 기종에 관계없이 이

용할 수 있도록 QR코드 인식방식 추가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 현금카드는 플라스틱 현금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탑재해 근접무선통신(NFC)을 통해 ATM 현금 입·출금 등에 이용하는 지급수단이다. 그러나 근접무선통신을 인식할 수 있는 ATM 기기가 제한적인 데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해 그동안 이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앞으로 QR코드 방식이 추가 도입될 경우 국민들의 ATM 거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면서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ATM 위치, 서비스 내용 등을 찾기 위한 통합정보조회시스템의 이용 채널 확대 등을 통해 ATM 활용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현금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⑫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 및 국제기준 평가 등을 고려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업무를 확충할 계획이다(65~68p).

최근 빅테크기업의 지급서비스 부문 진출 확대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은 빅테크기업 감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빅테크기업 등 새로운 지급서비스 플랫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감시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실효적인 감시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최근 수년간 발의된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지속할 예

정이다.

아울러 전산장애 등 IT부문의 운영리스크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리스크 및 사이버 복원력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 시장의 건전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이용자 보호, 지급결제의 신뢰성 및 금융안정·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암호자산 규제·감시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기구의 지급결제 부문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